

오피니언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한정호



매년 국내 전력소비량은 돈으로 환산하면 30조에 이른다. 산불로 인한 피해액은 한 해 1천200억 원에 달하며 음주운전에 의한 사망자 수는 매년 6천여 명이며 피해액은 무려 2천100억 원이나 된다. AIDS에 의한 사망자 수는 현재까지 1천200명에 달하며 1인당 경제적 비용이 4억 원으로 추정된다. 흡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연간 9조 가까이 된다.

이 일정난 순실을 줄일 수는 없을까? 이러한 문제들의 공통점은 법적인 조치로는 한계가 있으며 개인의 자각이나 참여 없이는 해결이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고도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제도와 정책은 강제로만 규정하기에 한계에 따른다. 때로는 벌금으로, 때로는 형벌로, 때로는 포상으로 해결해보려 하지만 한계가 있다.

이러한 공익적 손실문제나 목표달성을 해결하는 데는 3E의 조치단계가 있다. 첫 번째 E는 Enforcement로 법적인 강압조치이다. 둘째는 Engineering으로 기술적인 차원에서의 조치이다. 셋째는 Education으로 교육적인 조치이다. 산불방지를 예로 들면 법적인 조치는 산 근처에서라도 흡연을 하면 과중한 벌금을 부과하는 법을 만드는 것이다. 기술적 조치는 안전

한 곳에 캠프장을 만들어 준다든가 산불이 나기 쉬운 진입로는 폐쇄조치를 하는 것이다. 교육적 조치는 효과적인 산불방지 캠페인이나 계몽교육을 전국적으로 벌이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법적인 조치와 기술적인 조치는 그린대로 강한 편이다. 음주, 흡

과학적인 공익 캠페인의 절실함

연, 산불 안전벨트 등에 대한 법적인 규제와 기술적인 조치만 해도 꽤나 복잡한 수준의 강화나 발전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교육적인 면, 즉, 계몽과 공익 캠페인의 수준은 그러하지 못하다. 산진국에 비해 두드러지게 낙후하다. 과학적인 조사나 이론 없이 마구잡이식 구호가 난무할 뿐이다.

학문적으로도 이 분야는 낙후하다. 심리학, 마케팅학, 커뮤니케이션학, 광고홍보학, 사회학 등 관련분야에서 간헐적으로 연구가 나오고 있기는 하나 매우 빈약하다. 정부에서는 해당 이슈에 따라 표어 공모전을 벌이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과

은 1950년 산불로 화상을 입어 연기에 그은 새끼곰의 상징을 이용하여 60년째 지속되고 있는 공익캠페인으로 매우 다양한 교육과 이벤트가 전략적으로 이루어진다. 마케팅의 개념을 도입한다는 것은 과학적인 조사를 바탕으로 하다는 것이다.

산불방지를 위해 맥파이어 같은 학자들은 무려 16가지 인식적인 접근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밤에 동물들이 생활하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어 산이 인간들의 심신단련장이 아니라 동물들의 마을과 같은 곳이라는 인식을 주는가 하면 산불을 방지하는 행동 자체를 짜증스런 일이 아닌 스릴과 도전으로 인식하게 만들기도

한다. 방법은 마치 기업의 브랜드들이 시장에서 경쟁하듯 다양하며 큰 효과도 거둘 수 있다.

공익 캠페인에 거는 일반인의 기대는 대체적으로 미미하지만 비용대비 효과를 생각하면 문제는 달라진다. 예를 들어 공익 캠페인 전문가들은 효과적인 에너지 전략 캠페인으로 5%의 절약목표를 달성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돈으로 환산하면 연간 1조 5천억의 거금이며 같은 목표치를 적용하면 음주운전의 경우 한 해에 300명의 목숨을 구한다. 60억 원의 산불피해를 줄인다. 공익캠페인의 비용은 법적인 조치나 기술적인 조치에 비해 훨씬 적다.

운이 좋으면 히트한 공익광고 하나로도 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이는 과학과 전략의 영역이다. 소득수준의 증대로 복지가 향상되면 공익캠페인의 필요성은 더욱 커진다. 암과의 전쟁, 자연보호, 산성비 피해 줄이기, 낙태 줄이기, 청소년 음주 방지, 대중교통 이용하기, 안전벨트 착용하기, 비만에 방지 등 수많은 사회적 과제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며 이를 위해서는 결국 법적인 강제조치는 최소수준에 머물고 많은 부분이 공익캠페인에 의존하게 된다. 이제 OECD 국으로서의 면모를 살려 과학적인 공익캠페인의 개발과 지원에 눈을 돌려야 한다.

〈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의료 칼럼

박진우



아는 분이 많지는 않겠지만 올해 11월 11일은 제39회 '눈의 날'이다.

눈의 날을 정한 것은 소중하지만 무심할 수 있는 눈 건강을 1년에 한번이라도 생각해보자는 뜻이다. 1년에 적어도 한 번은 안과를 찾아 눈에 이상이 있나 없나 살펴보고, 미리미리 눈 건강을챙기자는 의도로 국민들에게 안과질환에 대한 설명회 및 국민민족사업을 벌써 39회 해 오고 있다.

하지만, 결과는 싸늘하게도 지나가는 국민 100명에게 11월 11일이 무슨 날입니까? 질문을 한다면 대부분의 대답은

더 알아주면 어떨까 한다.

첫째는 눈의 이상이 없더라도 1년에 한 번은 안과 정기검진을 통해 녹내장이나 백내장 등을 미리 진단해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둘째는 눈 주변 감염 등을 막기 위해 손 씻기를 생활화하자는 것이다. 요즘 신종플루 때문에 더욱 강조되고 있지만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 등을 사용해 하루에 8번 정도 손 씻기를 잘하는 것만으로도 다래기 및 눈병 등 전염성 안과질환을 90% 이상 예방할 수 있다.

셋째는 실내에서 PC를 많이 사용하는

눈의 날과 빠빠로 데이

빠빠로데이일 것이고, "잘 모르겠다"는 답변이 다음 일 것이다. 물론 눈의 날이라고 말한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가장 성공한 마케팅으로 꼽히는 빠빠로데이는 밸론타인데이나 화이트데이 등으로는 달리 우리나라에서 생긴 토종기념일이 깊은 층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된 경우라고 한다. 1994년 부산의 한 여중생이 숫자 '1'이 네 번 겹치는 11월 11일에 친구끼리 우정을 전하면서 '끼크고 날씬하게 예뻐지자'라는 의미로 빠빠로를 고관하던 데서 유래되었다고 하는데, 이제는 초등학생들도 다 아는 유명한 기념일이 되어버린 것이다.

넷째는 소중한 아이들의 눈 건강인데 생후 3개월이 되어도 눈을 잘 맞추지 못하거나 눈이 물체를 따라 움직이지 않을 때, 눈색깔이 다를 때는 바로 안과 진료를 받아 보아야 하며 눈을 자주 비비고 깜박일 때, 눈이 자주 떨릴 때, TV를 자주 가까이 보려고 할 때에는 눈의 운동장애나 사시, 또는 다른 심각한 질환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안과 진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11월 11일은 빠빠로데이이자 눈의 날이다. 이번 빠빠로데이부터는 소중한 눈을 위해 4가지 눈 건강 수칙도 기억해 보는 것이 어떨까 권해 본다.

〈이연안·병원 원장〉

는 현대인이 안구건조증 등을 막기 위해 50분 정도 업무를 보았다면 약 5분 정도는 먼 산이나 창밖을 바라보거나 눈을 감고 있는 것이 좋으며 실내 환기를 자주시키고 수분 섭취도 충분히 하는 것이 좋다. 증상이 심하거나 통증이 있으면 일차적으로 인공눈물을 사용하고 안약 사용 후에도 증상이 계속된다면 안과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

넷째는 소중한 아이들의 눈 건강인데 생후 3개월이 되어도 눈을 잘 맞추지 못하거나 눈이 물체를 따라 움직이지 않을 때, 눈색깔이 다를 때는 바로 안과 진료를 받아 보아야 하며 눈을 자주 비비고 깜박일 때, 눈이 자주 떨릴 때, TV를 자주 가까이 보려고 할 때에는 눈의 운동장애나 사시, 또는 다른 심각한 질환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안과 진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11월 11일은 빠빠로데이이자 눈의 날이다. 이번 빠빠로데이부터는 소중한 눈을 위해 4가지 눈 건강 수칙도 기억해 보는 것이 어떨까 권해 본다.

〈이연안·병원 원장〉

기고

이승호



세계 최초로 미국의 엘로우스톤 국립공원이 지정(1872년)된 이후 우리나라에는 이보다 100여 년이 늦은 1967년 지리산 국립공원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20개소가 국립공원으로 지정·관리되고 있다.

특히 1981년에는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이 지정됐고, 관리면적이 위낙 넓어 2000년 신안·진도군을 관리하는 다도해 해상서부사무소(이하 다도해 서부사무소)를 추가 개소하게 됐다.

국립공원 지정 당시 주민들은 공원 지정으로 인해 관광지가 될 기대를 안

및 정비, 집단시설지구 정비 등 주민의 실질혜택을 위한 지원보다 국립공원 사업 개념의 기반시설 위주의 지원이 주를 이뤄 주민의 만족도는 높지 않은 상태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해 지난 2007년부터 지역 전통문화 계승·복원을 위해 흙산도 버리, 진리 당집을 복원하고 낙도주민 PC 무상수리 및 지역 내 소외계층 1:1 밀착지원을 해오고 있다.

특히 2009년부터 자매결연 마을을 대

상으로 '국립공원 지역주민의 날'을 지정해 주민과 함께하는 학습의 장을 마련했으며, 공원 내 주민의 소득증대를

국립공원과 지역사회의 파트너십

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 많은 지역이 국립공원에 편입되기를 희망했고, 이에 따라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및 다수의 경작지까지 포함했다. 그러나 이러한 주민들의 기대와는 달리 당시의 국립공원은 개발과 보전 사이의 상반된 논리를 조화시킬 수 있는 경험과 혼용·정책적 측면이 미완성된 시기였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면서 국립공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1987년 공원관리 전문기관인 '국립공원 관리공단'이 설립됐으며, 90년대 들어 본격적으로 보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보전지향적 정책이 추진되기 시작했다. 2000년대 들어 공원 내 지역주민들의 불이익을 해소함과 동시에 상호 동반자적 관계 형성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적 접근이 시작됐다.

최근의 이러한 정책들은 수십 년 간 국립공원과 갈등관계로 인해 불신의 벽이 높았던 주민과 국립공원이 상생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나아가는 과정으로 일회성 사업을 지향, 상호 감동을 통해 신뢰관계를 회복하고 가까운 이웃이 되기 위한 작은 시작이 될 것이다.

〈국립공원관리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서부사무소〉

비데 오작동 '불안'… 철저한 품질관리를

다. 그래서 그동안 받은 A/S 횟수도 많고 비용도 적잖았다.

믿고 구입해서 사용했던 비데에서 이러한 감전 위험이나, 화재, 오작동을 느낀 사람이 주변에 나 말고도 상당히 많았다.

제품대로 물을 뿌리는 것은 수리를 받으며 참고 지낸다고 하지만 가끔씩 씨리거리며 전기를 끄거나 좀체 불안하고 걱정됐다. 요즘 비데는 생필품 중에 생필품이다. 이런 각종 오작동과 사고의 원인이 생기지 않도록 품질관리에 좀 더 철저히 해주기를 바란다.

▲김석원·광주시 광산구 안평동

도 차량 내 보이는 곳에 놓아두는 것 역시 절도범들의 표적이 될 수 있다.

운전자가 운행시에 안전운행이 습관인 것처럼 주차시에도 주차습관이 필요할 듯하다. 즉 내비게이션은 주차시에 항상 분리하여 가져가고 차량 내의 물품들은 보이지 않게 정리하는 것도 운전자가 갖추어야 할 중요한 습관이다.

▲유은진·광주시 서구 덕흥동

시설

정총리 세종시 해법 너무 무책임하다

정운찬 국무총리가 4일 '세종시 수정'을 위한 정부 대책과 관련 "가급적 내년 1월까지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시 수정을 공식화한 것이다.

정총리는 이날 "지금 세종시에 대한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대안을 가지고 있는 않다"고 했다. 이명박 대통령과 정총리가 행정복합도시를 대신할만한 구체적 대안 없이 세종시 수정 드라이브를 걸어왔다는 사실을 토로한 것이다. 그동안 실제적인 대안 없이 '세종시 수정'이란 결론부터 내놓은 꽂이 됐다. 수정인의 방향과 내용 등 아무런 밀그림도 그리지 않은 채 '자족도시' 운운해 왔던 것이다. 정총리의 세종시에 대한 로드맵은 너무 무책임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정총리는 내주 중 위원회와 기획단을 구성해 11~12월 의견 수렴 및 그동안 연구된 다양한 대안을 검토후 한년 1월 말까지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안

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세종시 자족기능 보완방안을 면밀히 연구했다고 했다. 하지만 그동안 면밀히 연구했다는 보완방안이 무의인자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 세종시 수정이 '뜬구름 잡기'가 아니라면 최소한 보완방안의 윤곽이라 밝혔어야 했다. 미리 결론부터 내놓고 형식적인 여론수렴을 한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세종시의 해법은 원칙과 신뢰를 바탕으로 국민의 뜻에 따르는 게 순리다. 또한 대통령이 세종시에 관해 뭔가 특별한 구상이 있다면 당당하게 그 구상부터 밝히고 국민을 설득해야겠다. 지금과 같은 방식은 정치권은 물론 나라 전체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만 감당하게 될 것이다.

세종시 수정 공식화로 앞으로 논란은 더욱 증폭돼 온 나라가 한바탕 흥역을 치를 게 벤하다. 이에 따른 국론분열과 갈등의 심화가 걱정이다.

'급증하는 다문화가정' 지역민 의식 변해야

광주·전남지역이 급속도로 다문화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지난 6월 말 현재 국제 결혼을 통해 광주·전남지역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 여성과 다문화가정에서 태어난 자녀가 각각 1만명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가정 증가추세는 전남이 더 가파르다. 지난 4년간 전남에 거주하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은 3배, 국제결혼 가정 자녀는 2배 이상 증가했다. 이처럼 외국 국적 배우자는 '낯선 이웃'의 범주를 넘어선다.

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산으로 다문화 시대에 더욱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수많은 외국인을 이방인으로 방치한다면 새로운 형태의 사회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외국인들이 당당한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이들이 한국생활에서 느끼는 어려움은 여전하다. 전남도가 지난해 말 22개 시·군에 거주하는 국제결혼 이주여성 5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 39.9%가 언어문제로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경제적인 고충도 21.2%를 차지했다. 언어와 경제적인 문제가 이주여성의 한국정착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2세들도 사회적 문제로 고통받는 경우가 늘고 있다.

다문화 시대를 맞아 지역민들의 의식이 변화되어야 한다. 아직도 피부색으로 차별하고 협동주의에 집착하는 경우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산으로 다문화 시대는 더욱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수많은 외국인을 이방인으로 방치한다면 새로운 형태의 사회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외국인들이 당당한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이들이 한국생활에서 느끼는 어려움은 여전하다. 전남도가 지난해 말 22개 시·군에 거주하는 국제결혼 이주여성 5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無